

# WELFARE ISSUE TODAY

VOL.157(2026년 4월)

큰글자

복지이슈 TODAY  
아동

## 국내이슈

- 01 이주민 밀집지역 아동의 성장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 좌현숙
- 02 학교 담장을 넘어 '사회적 아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학습 생태계 구축 | 박애경
- 03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제도를 넘어 삶으로 다가가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의 변화와 현장의 실천  
| 한성은
- 04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자살 현황과 정책 과제 | 김소형

## 이슈와 통계

통합돌봄 시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인권·안전은 준비되어 있는가? | 이송희, 박상민

## 해외동향

- [영국] 새로운 국가 아동보호기구(아동보호청) 설립 배경 및 계획 | 윤새별
- [프랑스] 프랑스 교육우선지역 제도의 현재 | 임박네
- [프랑스] 프랑스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직업활동 진입을 위한 지원정책 | 이은주
- [독일] 독일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 권민정
- [호주] 철학 없는 디지털 복지?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던지는 질문 | 박홍재
- [일본] 아동복지와 모자보건 기능의 통합지원을 위한 아동가정지원센터의 '서포트 플랜'  
| 최은희

# WELFARE ISSUE TODAY

## 복지이슈 TODAY

- 발행인**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 편집인** 류명석(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센터장)
- 기획위원회** 김원호(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궁은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아영(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복지이슈Today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내외 복지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2013년 4월에 창간된 월간지입니다.

- 본지는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s://www.welfare.seoul.kr> '아카이브 → 복지이슈 투데이'에 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발간에 관련된 문의사항과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간부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센터 02-6353-0413, today@welfare.seoul.kr)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서울시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Contents

## 국내이슈

- 01 이주민 밀집지역 아동의 성장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I 좌현숙(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04
- 02 학교 담장을 넘어 '사회적 아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학습 생태계 구축  
I 박애경(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교육연구사) 07
- 03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제도를 넘어 삶으로 다가가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의 변화와 현장의 실천 I 한성은(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기획실장) 10
- 04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자살 현황과 정책 과제 I 김소형(건강안전복지연합 부연구위원) 13

## 이슈와 통계

통합돌봄 시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인권·안전은 준비되어 있는가?

- I 이송희(서울시복지재단 연구3팀 연구위원), 박상민(서울연구원 서울RISE센터 연구원) 16

## 해외동향

- [영국] 새로운 국가 아동보호기구(아동보호청) 설립 배경 및 계획  
I 윤세별(영국 에딘버러 대학 사회·정치학 박사과정) 21
- [프랑스] 프랑스 교육우선지역 제도의 현재 I 임밖네(파리7대학 사회학 박사) 24
- [프랑스] 프랑스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직업활동 진입을 위한 지원정책  
I 이은주(사회정보연구원 연구위원) 27
- [독일] 독일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I 권민정(보쿰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30
- [호주] 철학 없는 디지털 복지?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던지는 질문  
I 박홍재(웨스턴시드니대학교 교수) 33
- [일본] 아동복지와 모자보건 기능의 통합지원을 위한 아동가정지원센터의 '서포트 플랜'  
I 최은희(마쓰야마시노노메여자대학 인문과학부 준교수) 36

# 이주민 밀집지역 아동의 성장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좌현숙(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4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민은 총 2,583,62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0%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인구 규모 6위인 경북(2,578,999명)의 인구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다.<sup>1</sup>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심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 시대에 직면했으나, 지역 및 산업 수요로 인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이주배경 주민과 급증하는 이주배경 학생에 주목하여 2025년 「이주배경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방 공단 배후지 등 특정 지역 학교로의 밀집 현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통상 지역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인 시·군·구를 이주민 밀집 지역으로 정의하는데, 국제 이주가 지속되면서 일부 도시와 산업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민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전교생이 100명 이상이면서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를 ‘이주배경 학생 밀집 학교’로 정의한다. 이러한 학교는 2023년 87개교<sup>2</sup>에서 2024년 100개교로 증가했다.<sup>3</sup>

이주민 밀집 지역은 다문화 공존의 장인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는 공간이다. 열악한 주거 환경, 낮은 서비스 접근성, 제한된 교육 및 복지 자원은 아동·청소년 성장에 제약이 된다. 언어와 문화 차이, 사회적 낙인 및 차별 인식은 이들을 소외시킬 위험이 크므로 단순히 다문화 가정이 모여 사는 곳을 넘어 아동 발달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내재된 공간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가족, 학교, 지역사회 자원을 가진 채 성장하느냐에 따라 이주배경 아동과 비이주배경 아동 사이에는 교육, 건강, 진로 등 전반적인 ‘기회 구조’의 격차가 발생한다. 부모의 취약한 고용 상태 등

①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행정안전부(2025),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② 윤현희·김경애·김나영·이동엽·이정우·이희현·이재창·홍미영(2024),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③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방안”(2025.2.11.), 제1차 사회환경장관회의, 교육부 보도자료.

이주 과정에서 파생된 위험 요소는 발달 격차를 구조화하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어 불평등으로 이어지기 쉽다.<sup>4</sup> 다만 밀집 지역이 사회적 응집성 및 자조 네트워크와 결합될 경우 정서적 안정과 정체성 유지라는 보호 효과도 나타난다. 결국 아동의 성장 결과는 지역의 경제적 토대와 교육의 질, 지지 체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민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의 성장격차 발생을 줄이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복지, 행정을 아우르는 다면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되고 작동되어야 한다.<sup>5</sup> 우선 한국어 교육을 공적 체계로 확장하여 초기 생활 언어부터 학습 언어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인프라 부족 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나 지역 기관 협력 모델을 통해 학습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 내부적으로는 언어 장벽으로 인한 교과 학습 결손 방지 프로그램을 정규 수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방과 후나 주말 보충 수업을 제공하고, 비이주배경 학생과 함께하는 팀 기반 학습 및 교류를 촉진하여 고립감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다문화적 배경을 결핍이 아닌 역량으로 인식하여 진로 설계 및 사회성 발달과 결합함으로써 자존감을 키울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 사이의 단절된 소통 구조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가정통신문 언어를 다각화하고 다채널 소통 방식을 도입하여 정보 소외를 막고 학부모 참여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이주 가족의 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한 돌봄 센터 확대, 맞춤형 돌봄 바우처 등 통합적 가족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계는 이주민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정서적 기반 위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토대가 된다. 마지막으로 정책 실효성을 위해 정밀한 실증 데이터와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 실태조사를 넘어 지역별·유형별 특수성을 반영한 통합적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의 기초 자료로 삼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고도화하는 등 선언적 수준을 넘어서는 지역 차원의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예산편성

④ 신윤정·양미선·최혜리(2022), 인구변화대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정책방안: 이주배경 아동의 발생·성장 환경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⑤ 좌현숙·김희주(2024), 광주광역시 이주민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의 생활실태 연구조사, 초록우산.

을 의무화하고 부서 간 협력 체계를 명문화하는 등 실질적인 집행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가 작동할 때 이주민 밀집 지역에서 성장하는 아동의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진다.

## 국내이슈 02

# 학교 담장을 넘어 ‘사회적 아동’으로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학습 생태계 구축<sup>1</sup>

박애경(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교육연구사)

“애초부터 학교에 가는 것은 선택이라는 점을 아이에게 강조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이가 교우관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 싫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다니지 않는 것도

선택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고 했지요.”

-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인터뷰 중에서

우리 사회에서 ‘학교’는 오랫동안 교육의 동의어이자, 아동과 청소년의 배움을 위한 정상(normal)의 공간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2024년 기준 국내 학령기 학생의 약 3.2%에 이르는 약 17만 3천 8백여 명의 아동·청소년이 아예 정규 학교에 입학하지 않거나 상급학교 미진학, 자퇴, 대안교육 및 홈스쿨링 등의 사유로 학교 밖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밖 청소년(out-of-school youth)을 과거에 학교 부적응이나 일탈 학생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주체적 삶을 위해 대안적 배움을 선택하는 ‘능동적 학습자’이자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할 ‘사회적 아동’으로 보고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이 단순한 학교 복귀를 넘어 삶에 대한 보편적 권리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의 관점에서 포용하고자 하는 시각의 변화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 28. 제정)과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본고는 서울특별시

① 박애경(2025),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구안 연구: 세계시민교육 특강을 사례로, 글로벌교육연구, 17(1), pp.5-32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 작성하였다.

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인 ‘친구랑’에서 진행한 세계시민교육 특강을 사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 특성을 규명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 지원 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집단의 가장 큰 특징은 상호 무연관성과 무학년제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나이도, 학교를 떠난 시점도, 선수 학습 정도도 제각각이다. 그래서 학습자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할 정교한 관계 맺기 전략이 필수적이며 지식의 전달보다 ‘관계 형성’이 배움의 전제조건이 된다. 연구 과정에서 확인된 또 다른 특징은 장소의 비고정성과 학습 경험의 상이성이다. 아이들은 고정된 교실이 아닌 지역사회 곳곳의 센터나 체험 현장을 배움터로 삼는다. 또한, 교육의 강제성이 사라진 자리에는 자율적 흥미가 학습의 동력이 된다. 기후 정의나 국제 연대와 같은 세계시민적 가치에 아이들이 몰입한 이유는 그것이 교과서 속 글자가 아닌 자신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배움’이라는 사회적 시각을 통해 학습자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과정이 곧 교육이자 복지가 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들에 대한 요구가 ‘학교 복귀’에서 ‘사회적 성장’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력인정 중심의 지원 체계를 ‘역량 중심’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현재 많은 지원이 학교 복귀(학업중단속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나 검정고시 합격에 치중되어 있으며, 이는 아이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 오히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낙인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과 같이 공동체 의식과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공교육 수준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기반의 유연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연구에서 아이들은 현장 방문과 체험형 활동에서 가장 높은 흥미와 효능감을 보였다. 서울시 내 다양한 복지·문화 자원을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자산으로 활용하는 ‘지역밀착형 교육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셋째, 학습자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수요자 맞춤형 학습’이 정착되어야 한다. 교수자는 지식의 전달자를 넘어 아이들이 스스로 배움의 주제를 발굴하도록 돕는 큐레이터이자 퍼실리테이터가 되어야 한다. 이는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복지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모든 아동은 시민으로 성장할 권리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라는 특정 공간에 있지 않을 뿐,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아동이자 미래의 시민이다. 이들이 차별 없는 교육을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당연한 책무다. 배움의 경계가 학교 담장을 넘어설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교육 복지는 진정한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제도를 넘어 삶으로 다가가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의 변화와 현장의 실천

한성은(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기획실장)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에서 24세 사이 보호가 종료되어 사회로 나오는 청년을 말한다. 과거의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이 종료된 상태를 설명하는 데 머물렀다면, ‘자립준비청년’은 미래를 준비하는 능동적 주체라는 인식 전환을 담고 있다. 명칭의 변화는 곧 정책의 변화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의 확대, 주거·교육·취업 지원, 심리정서 서비스 강화 등 자립지원 정책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해왔다. 특히 서울시는 타 시·도에 비해 정책적인 관심이 높아, ‘자립준비청년의 꿈과 첫출발에 동행하는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자립지원 마스터 플랜 등 촘촘한 지원을 지속해왔다.

서울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국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되기 이전인 2006년부터 서울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을 운영하며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왔다. 이후, 2022년 11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을 개소하였고, 청년들의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23년 7월 용산구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이전하면서,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인 영플러스서울(O+SEOUL)의 문을 열었다. ‘영플러스서울(O+SEOUL)’은 자립준비청년의 첫 출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공간으로, 심리·정서 지원부터 주거·생활 안정, 일자리·진로, 교육, 힐링 프로그램, 자조모임 활동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한다. 도움이 절실하지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청년들에게 이 공간은 물리적 장소를 넘어 ‘연결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삶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보호 종료 후 일상은 매일매일이 도전의 연속이다. 이에 서울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호종료 3개월 전부터 상담을 시작해 종료 이후 1:1 맞춤형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집중사례관리)를 연계한다.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정착을 지원하며,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유관부서 및 민

관협력 네트워크와 연결고리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5년 이후 자립준비청년의 위기상황 발생 시 SOS긴급자금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2025년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인원은 1,759명(보호종료 5년 이내)으로 이 중 688명의 청년에게는 좀 더 집중적인 맞춤형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통한 집중사례관리가 제공되었으며, 총 20,734건의 상담, 6,187건의 서비스가 지원되었다. 또한 경계선 지능, 중증우울, 정신질환, 자살이슈 등 고위험군 60명에 대해서는 전담솔루션팀(자립동행팀)을 구성해 고난이도 사례관리를 추진하였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자립의 현실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청년의 삶은 매뉴얼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자립의 과정에는 크고 작은 위기가 필연적으로 따른다. 어떤 청년은 빠르게 취업과 자립을 이루지만, 또 다른 청년은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다. 특히 심리적인 어려움은 청년의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세상에 홀로 서 있다는 고립감,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낮은 자기효능감 등이 맞물려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 이에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 서비스, 멘토멘티 사업, 힐링캠프,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며 정서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자조모임인 '서울바람개비서포터즈'는 청년들이 서로의 자립을 위한 바람(동력)이 되어 바람개비가 돌듯 삶의 변화와 도전에 맞서 스스로의 길을 찾도록 돕는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년의 목소리를 사회와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있다.

서울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사회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자립은 자립 이후의 지원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보호아동 시기부터 체계적인 준비와 역량 형성을 지원하는 선제적 개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이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제도의 공백, 지역 간 격차, 담당자 1인당 사례 수 및 업무과중은 여전히 현장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과거보다 더 청년의 삶에 가까

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립은 혼자 견뎌내는 일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정이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민간의 따뜻한 관심이 맞물린 지금의 흐름은 매우 긍정적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이들의 ‘디딤돌’이 되어주어야 한다.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 잠시 밟고 서는 단단한 기반처럼, 우리 사회의 지지가 이들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 위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은 당당한 시민으로서 자신만의 삶을 세워나갈 것이다.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자살 현황과 정책 과제

김소형(건강안전복지연합 부연구위원)

우리나라는 자살(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편이다. 2022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23.2명이 자살로 사망하였는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다.<sup>1</sup> 2024년 자살 사망자는 14,872명으로 2015년 13,513명 대비 10.1% 증가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 아동·청소년(0세~19세)<sup>2</sup>의 자살률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집단인 15세~19세는 2015년 10만 명당 6.5명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4년 10만 명당 12.6명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많은 구간인 10세~14세는 다소 등락은 있었지만 2015년 10만 명당 1.2명에서 2024년 3.5명으로 증가하였다. 9세 미만은 자살 사망자가 거의 집계되지 않았다.<sup>3</sup>

아동·청소년 집단의 자살 시도는 성인 인구 집단보다 높은 편이다. 2021~2022년에 실시된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6세~17세의 현재 자살 관련 행동 비율은 자살사고 1.0%, 자살시도 0.2%, 비자살적 자해 1.4%이다.<sup>4</sup> 한편, 18세 이상 성인은 자살사고 0.5%, 자살계획 0.3%, 자살시도 0.0%이다.<sup>5</sup> 이러한 경향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2025년 기준 자살 시도율은 2.7%(남학생 2.2%, 여학생 3.2%), 자살 생각률은 11.6%(남학생 8.6%, 여학생 14.8%)이다.<sup>6</sup>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이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요인이 된다

①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5), OECD Health Statistics 2025.

②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0세~18세,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10세~24세로 정의됨. 본 원고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을 각종 참고자료가 제시한 기준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술함.

③ 국가데이터처(2025), 사망원인통계. <https://kosis.kr>

④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보건복지부, 2024)는 소아·청소년(만 6세~17세)의 현재 자살 관련 행동을 지난 2주를 기준으로 확인함.

⑤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보건복지부, 2022)는 자살 관련 행동을 평생, 1년, 1개월로 구분하여 공표하였지만, 본 원고에서는 소아·청소년 집단의 현재 자살 행동과 비교를 위하여 1개월의 수치를 인용함.

⑥ 교육부·질병관리청(2025), 제21차(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는 다수의 분석이 있는 가운데,<sup>7</sup>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4년 기준 42.3%로 최고점에 이르렀다.<sup>8</sup> 더불어 중등도 이상 불안을 느낀 비율인 범불안장애 경험률은 14.1%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기의 삶의 질은 생애주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면밀한 관찰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도 이어져 왔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제정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다섯 차례 수립했다. 교육부는 2012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전면 도입을 시작으로,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2016년~), 학생 마음바우처(구 정신건강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2017년~), 자살위기학생 문자상담 서비스 운영사업(일명 ‘다 들어줄 개’, 2018년~) 등 학생 자살 예방 정책을 확대 왔다.

그럼에도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교육부는 2024년 12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2025년 하반기부터 학생 심리부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학생 심리부검 제도는 2015년~2022년에 시행했던 학생자살사망사안보고서 작성 및 심리부검을 개선·강화하여 재개하는 것이다. 2025년 9월에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14개 부처가 협력하여 ‘국가자살예방전략(2025년~2034년)’을 수립하였다. 특히, 교육부와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정책을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중앙정부 정책을 더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살예방법에 따라 각 시·도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것은 아니다. 한편, 대구 등 일부 지역이 교육청과 더불어

⑦ 오동균·권순용(2019), “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 불안, 충동성, 우울, 자살 생각의 인과적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16.4: 29-45; 박현섭·홍성애(2020), “청소년 자살생각 영향 요인의 성별 비교,” 대한보건연구 46.3: 47-57; 손병덕(2023), “청소년의 자살생각·계획·시도와 사회·인구학적 요인들 사이에서 우울·불안, 친구관계의 조절 효과,” 청소년학연구 30.9: 491-508.

⑧ 국가데이터처(2025), 아동·청소년 삶의 질.

학생 자살예방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한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이후 예산 문제로 중단된 ‘학교보고 및 심리부검 보고서’ 사업을 지자체 중심으로 변경하여 시행한다면, 현장 밀착형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자살 예방 활동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연계를 통해 한층 강화되기를 희망한다.

## 이슈와 통계

# 통합돌봄 시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인권·안전은 준비되어 있는가?<sup>1</sup>

이송희(서울시복지재단 연구3팀 연구위원), 박상민(서울연구원 서울RISE센터 연구원)

서울시는 2025년 7월경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그에 따라 장애인의 고령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고령장애인의 증가는 장애인구 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책 전반에 있어 돌봄 수요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전환을 동시에 요구하는 구조적 변화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통합돌봄 사업이 3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 장애인 돌봄의 핵심 인력인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근무환경과 안전, 인권에 대한 이슈는 향후 장애인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는 2021년 12월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제5조에 근거하여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2024년 실시된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고령장애인의 증가와 통합돌봄의 정책적 맥락 속에서 활동지원사의 인권과 안전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자격 특성과 돌봄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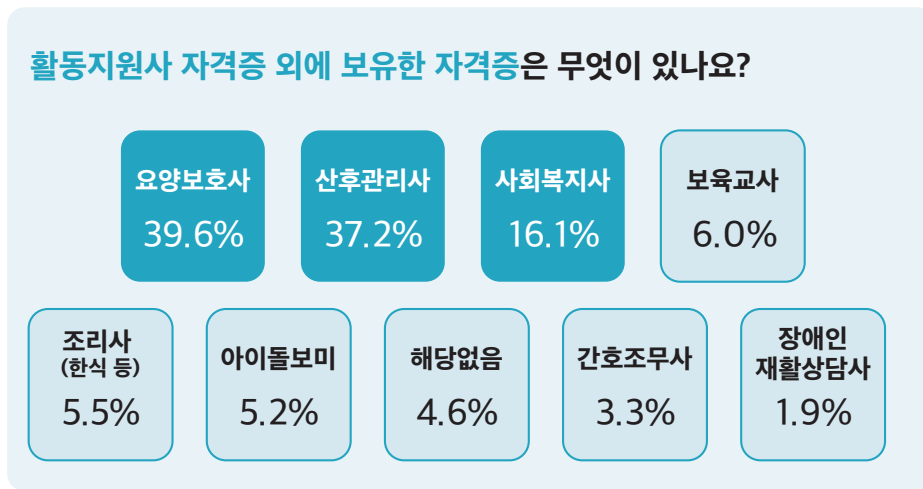
2024년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한 처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3,005명<sup>2</sup> 중 여성이 82.4%, 60대 이상이 43.4%로 나타나 활동지원사 인력은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고 연령 또한 고령화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sup>3</sup> 이는 고령장애인을 지원하는 돌봄 인력 또한 고령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돌봄노동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누적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을 시사한다.

- 1 본 고는 '이송희 외(2024),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함.
- 2 설문조사 모집단은 서울시 등록 장애인 활동지원사 총 29,331명(2024.1월 기준)임.
- 3 성별의 경우 여성(82.4%) > 남성(17.6%), 연령대의 경우 60대 이상(43.4%) > 50대(36.4%) > 40대(13.6%) > 30대(5.0%) > 20대(1.6%) 순

특히 활동지원사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비율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활동지원사가 기존의 사회참여와 자립지원 중심의 활동보조 역할을 넘어, 중증·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신체 돌봄·요양 기능까지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그림 1).

**그림 1**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유 자격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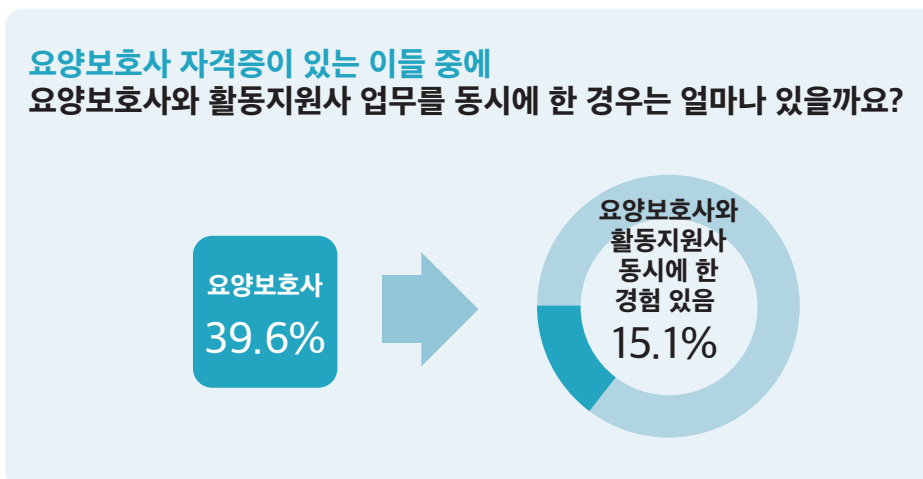
사례수: 전체(3,005명), 단위: %



실제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 중 15.1%는 활동지원사 업무와 요양보호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통합돌봄 환경에서 장애인 돌봄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점차 복잡화·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2).

**그림 2** 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 업무 병행 실태

사례수: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1,189명), 단위: %



## 통합돌봄 시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안전과 건강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는 동안 업무로 인한 질환이나 사고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6.9%가 '의사의 진단을 받은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하였으며, 감염성 질환(26.0%), 사고·부상(7.6%), 우울증 등 정신·심리적 질환(3.7%)도 보고되었다. 이는 중증·고령장애인 돌봄이 고강도의 노동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환이나 사고 발생 시 61.1%는 특별한 조치 없이 개인 비용으로 처리(예: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인한 파스 구입 등을 비롯)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7.9%), 기관 차원의 비용 지원(7.6%)이 이루어진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돌봄종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표 1).

**표 1** 장애인 활동지원사 업무로 인한 질환이나 사고 경험과 비용 지원

구분	조사 결과
업무로 인한 질환이나 사고 경험(전체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의 진단을 받은 근골격계 질환(26.9%)</li> <li>• 감염성 질환(26.0%)</li> <li>• 다치거나 사고(7.6%)</li> <li>• 우울증 등 정신·심리적 질환(3.7%)</li> </ul>
질환이나 사고에 대한 비용의 처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조치 없이 개인 비용 처리(61.1%)</li> <li>•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모름(15.3%)</li> <li>• 산재보험에서 지급·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7.9%)</li> <li>• 활동지원기관에서 관련 비용 지급(7.6%)</li> </ul>

## 장애인 활동지원사 인권 침해 경험과 대응 체계의 한계

활동지원사로 근무 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사례 역시 적지 않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어적 폭력(10.9%), 신체적 폭력(8.8%), 성적 폭력(2.1%) 등의 순으로 나타나 돌봄종사자에 대한 인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은 주로 활동지원기관 담당자(53.3%)와 동료 활

동지원사(19.9%)로 나타나 활동지원기관의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인권 침해 대응 및 노무교육 등 관련 교육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보여준다(표 2). 이와 더불어 도움 요청 이후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고충 신고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지자체 또는 자치구 차원의 모니터링과 점검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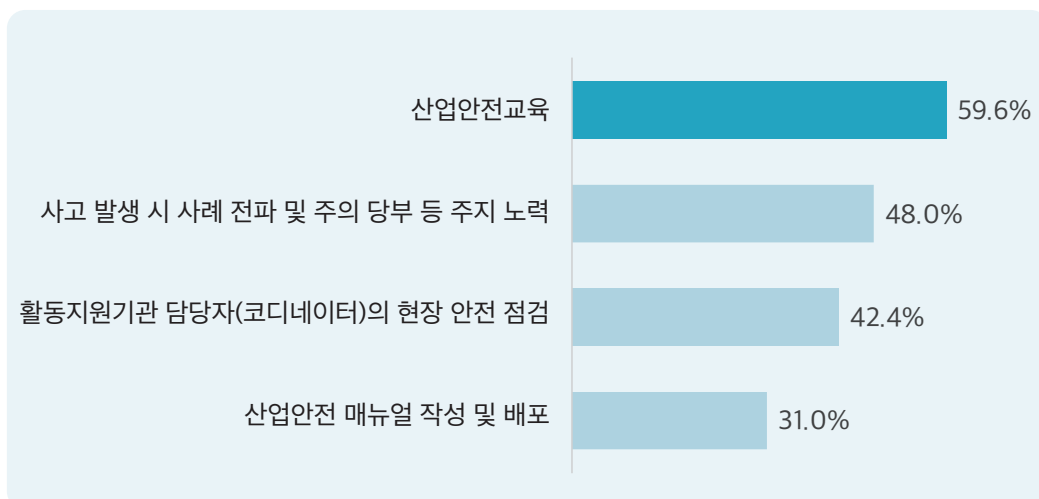
**표 2** 장애인 활동지원사 부당한 대우 경험 여부 및 도움 요청 대상

구분	조사 결과
부당한 대우 경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83.5%)</li> <li>• 언어적 폭력(10.9%)</li> <li>• 신체적 폭력(8.8%)</li> <li>• 성적 폭력(2.1%)</li> <li>• 경제적 폭력(1.9%)</li> </ul>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도움 및 의견 요청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지원 제공기관 담당자(53.3%)</li> <li>• 동료 활동지원사(19.9%)</li> <li>• 이용자 가족(13.4%)</li> <li>• 활동지원 제공기관 책임자(8.6%)</li> <li>• 혼자(1.5%)</li> </ul>

### 통합돌봄 정책 시행과 돌봄종사자 관련 정책적 시사점

현재 활동지원사의 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으로는 산업안전교육(59.6%), 사고 발생 시 사례 전파 및 주의 당부 등 주지 노력(48.0%), 활동지원기관 담당자의 현장 안전 점검(42.4%)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

**그림 3** 활동지원사 사고(안전) 예방을 위한 노력



이를 종합하면 통합돌봄 정책 시행과 맞물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과 함께 이를 구현하는 돌봄종사자의 인권과 안전, 건강을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포함되어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정책 과제로 첫째, 중증·고령장애인 돌봄 특성을 반영한 활동지원사 안전·건강 보호 체계 강화, 둘째, 인권 침해 예방과 사후 대응을 포함한 표준화된 인권 보호 매뉴얼 마련, 셋째, 코디네이터·이용자·가족을 포함한 통합적 교육과 예방 체계 마련을 제안한다. 이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서울시의 통합돌봄 체계를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로 구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것이다.

## 해외동향 영국

## 새로운 국가 아동보호기구(아동보호청) 설립 배경 및 계획

윤새별(영국 에딘버러 대학 사회·정치학 박사과정)

영국 정부는 2025년 12월, 학대와 위협으로부터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 아동보호기구(National Child Protection Authority. 이하 아동보호청)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아동보호청 설립은 아동 성 학대 독립조사(Independent Inquiry Child Sexual Abuse: IICSA)<sup>1</sup>에서 발간한 2022년 보고서의 핵심 권고를 이행하고, 케이시 감사(Casey Audit)<sup>2</sup>에서 제기된 집단 아동 성 착취 및 대응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행되는 개혁 조치이다. 아동보호청은 성 착취 및 학대, 가정폭력, 인신매매, 조직범죄 및 기타 복합적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동시에, 새로운 위협을 파악하고 시스템 전반의 책임성을 향상시키며 국가 차원의 감독을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는 위협 관련 정보가 흩어져 있고 데이터 분석이 불완전하며 중대한 사건을 통해 얻게 되는 개선안이 실제 현장에 반영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기관 간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유하고 보호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위해 단일 고유 식별자(single unique identifier)를 도입하는 법도 제안되었다.

2023년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에 따라 아동 안전 의무(child safety duties)<sup>3</sup>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2025년 2월에는 범죄 및 치안 법안(Crime and Policing Bill)을 통해 아동 성 학대 의무신고(mandatory reporting of child sexual abuse) 도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그루밍 범죄 조직의 지속적인 활동

- ① IICSA는 2015년 설립된 법정 조사기구로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기관 아동보호 실패 사례를 조사하여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② 집단 기반 아동 성 착취 및 학대에 대한 국가 감사(The National Audit on Group-based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CSEA)는 2025년 1월 총리와 내무 장관의 의뢰로 시작되어 2025년 2월 공식 출범하였고 케이시 남작(Baroness Casey)이 수행하여 Casey Audit이라고 불린다.
- ③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 의무사항(유해 콘텐츠 접근성, 위협, 보호조치 등 고려)이다.

(grooming gangs scandal)<sup>4</sup> 및 사라 샤리프(Sara Sharif) 사건<sup>5</sup> 같은 충격적인 사례 등을 아동 보호에 대한 중대한 실패(massive failings)로 보고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이번 개혁의 또 다른 배경이기도 하다. 새로운 기구 설립은 단독적으로 수행되기 보다 아동복지 및 학교법안(Children's Wellbeing and Schools Bill)을 통해 도입되는 광범위한 정책 패키지와 함께 추진된다. 아동보호 책임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현장에 전달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보호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그루밍 범죄 관련 경찰, 지방의회, 사회서비스 및 기타 기관의 지역 및 국가 차원 대응에 대한 조사도 병행된다. 이는 위법 행위나 은폐를 밝혀내 아동보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조사를 위해 6,500만 파운드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아동보호청 설립을 위해 12주간 협의 과정이 이어질 것을 발표하며 아동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장 실무자, 전문가, 가족, 피해 생존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아동보호청이 여러 아동보호기관 및 조직에 대해 아동보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권한을 갖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동 성 학대 전문센터(The Centre of Expertise on Child Sexual Abuse)는 IICSA 권고를 이행하여 새로운 아동보호청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동시에 아동 성 학대에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지원받는 아동의 비율은 지난 30년간 25%에서 사상 최저치인 3.5%로 감소하였음을 밝히며 통합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급격한 감소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같이 표현하였다. IICSA의 권고를 즉각 시행하기 보다 심각한 사건이 몇 차례 발생한 뒤에 이행하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될 수 있지만, 아동보호 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단행하는 개혁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안전이 보장되기를 바란다.

- 
- ④ 그루밍은 가해자가 아동, 청소년 또는 취약한 성인과 관계를 형성하여 이들을 학대하거나 특정 행동을 하도록 조종하는 과정을 뜻한다.
  - ⑤ 2023년 잉글랜드 서리(Surrey)에서 10세 아동이 장기간 폭행 및 방임을 겪고 사망한 사례로 가해자들인 가족이 해외로 도피한 뒤 체포되어 아동보호 실패 사례로 거론된다. 2024년 12월에 친부와 계모는 종신형을, 삼촌은 방조 혐의로 16년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national-child-protection-authority-announced>

<https://www.iicsa.org.uk/reports-recommendations/publications/inquiry/final-repor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ational-audit-on-group-based-child-sexual-exploitation-and-abuse>

<https://www.cps.gov.uk/south-east/news/father-and-stepmother-sara-sharif-sentenced-life-her-murder>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online-safety-act>

## 프랑스 교육우선지역 제도의 현재

임밖네(파리7대학 사회학 박사)

프랑스는 OECD 국가 중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 중 하나이다. 학생의 사회적 출신과 학교 간 사회적 분리가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로 인식되면서 프랑스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는 학교 교육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이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교육법 제 L.111-1조는 “공교육 서비스는 학생을 중심으로 설계·운영되며, 학업 성취와 교육 성과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지역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 평등에 기여한다. 모든 아동은 학습과 성장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어떠한 차별 없이 포용적 교육을 보장한다. 또한 학교 내 사회적 혼합을 촉진하고 학부모의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교육 공동체의 협력 속에서 학생 성공을 도모한다”라고 규정한다.

교육우선정책은 교육법에서 제시하는 부모의 사회적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1991년 우선교육지역정책(Zones d'Education Prioritaire: ZEP)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다. 2015년 개혁을 통해 ZEP는 우선교육네트워크(Réseaux de l'Education Prioritaire: REP)와 플러스우선교육네트워크(REP+)로 재구성되었다. 이 정책은 학생의 교육적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교수·학습 환경 개선, 교사 지원, 학교-가정 협력 강화, 학습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다. 특히 네트워크 기반 운영 구조를 통해 동일 학생 집단을 공유하는 중학교와 초등학교 간 교육 연속성을 확보하고 협력적 교육 실천을 지향한다. 2024년 기준,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생 5명 중 1명이 REP 또는 REP+에 속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다.

REP+는 우선교육지역 중 사회적 취약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REP와 REP+ 교사들은 동일한 신분과 기본 업무는 유사하지만 REP+ 교사는 시간·수당·협력 제도·교육 지원 측면에서 특수한 근무 조건이 적용된다. 우선, 교사 근무 시간 조직이 조정된다. 중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1.1의 가중치가 적용되어 교사의 실제 수업 부

담이 경감되며, 초등학교에서는 연간 18회의 반일 대체 교사가 배치되어 교사가 협력 활동과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전문성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2015년부터 우선교육 전담 연수 교사가 배치되어 REP+ 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연수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셋째, 교사에게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이 병행된다. REP+ 근무수당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000유로 인상되었고, 2021년에는 고정수당과 성과 연동 수당이 추가 도입되었다. 이는 취약 지역 근무의 부담을 보상하고 교사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REP 제도의 핵심 목표는 우선교육 대상 학생과 비대상 학생 간 학업 성취 격차를 축소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적·지역적 교육 불평등 감소를 지향하는 복합적 정책 장치가 활용되고 있다. 첫째, 학급 규모 축소 정책이 대표적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약 12명의 소규모 학급을 운영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중학교에서 소규모 그룹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과제 수행을 지원한다. 셋째, 학부모 참여 정책이 추진된다. 특히 외국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 참여 촉진 프로그램(OEPRE)을 통해 프랑스어 교육과 교육 제도 이해를 지원하고 문화적·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는 목적을 지닌다. 넷째, 학업 포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진학 동기와 교육적 기대를 높이기 위한 대표적 정책으로, 중학교를 중심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다섯째, 방과 후 학습 지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연계 및 방학 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역시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장치는 학습 경험 확장과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학생 간 사회문화적 자본 격차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다양한 쟁점과 한계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낙인효과 논쟁이 대표적이다. REP 또는 REP+라는 명칭이 학생과 학교에 부정적 이미지를 부여하여 학교 선택과 교육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본 제도의 교육 격차 완화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결과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며, 제도의 효과성을 둘러싼 학술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 취약 지역 특성상 학습 부진, 사회경제적 어려움, 문화적 다양성 등 복합적 교육 과제로 인한 교사 피로도 문제 역시 중요한 정

책 과제로 지적된다. REP 제도는 사회적 취약 지역 학생에 대한 집중 지원과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교육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낙인 문제와 정책 효과성 논쟁, 교사 근로 조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 속에서 지속적 평가와 조정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

- 임박네(2025), 프랑스의 학교 분리 대응을 위한 사회적 혼합 실험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8:66-82.  
Direction de l'évaluation de la prospective et de la performance (DEPP)(2025), L'éducation nationale en chiffres.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https://eduscol.education.fr/1028/la-politique-de-l-education-prioritaire-les-reseaux-d-education-prioritaire-rep-et-rep>  
<https://eduscol.education.fr/3568/education-prioritaire-reperes-historiques>  
<https://www.ac-paris.fr/les-reseaux-de-l-education-prioritaire-a-paris-123067>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43982767](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43982767)

## 해외동향 프랑스

# 프랑스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 직업활동 진입을 위한 지원정책

이은주(사회정보연구원 연구위원)

프랑스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은 니트(jeunes ni en emploi, ni en études, ni en formation: NEET)라 하여 직업도 없고, 학교 수업도 이수하지 않고, 직업교육도 받지 않는 15세~29세 청소년, 청년이 대상이다. 이들은 2025년 프랑스 인구의 14.49%, 약 140만 명으로 유럽국가 평균 12.8%보다 높은 수준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최종 목적은 이들의 사회진입과 사회통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방정책으로 잠재 대상자의 학업격려, 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미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을 위해 학교 밖에서 다른 방식의 교육지원과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활동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의 특징은 청소년복지 차원이 아니라 직업활동과 사회진입의 길을 마련해 주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더불어 정책은 청소년 범죄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전체적인 사회,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대상자와 정책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지만 고용시장 진입과 직업활동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6년도에도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고용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청년참여계약(Contrat d’Engagement Jeune: CEJ)’이 있다. 대상자는 16세~25세(장애인일 경우 30세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청년으로 이들의 개별활동을 동반, 지원하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은 활동으로는 직업교육 과정, 직업수련 과정, 현장 직업 체험활동이 있다. 이 계약에 참여하게 되면 주당 15~20시간의 의무 활동을 하고 월 500유로의 수당을 받는다. 이 계약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다가가기(Aller vers)’가 있다. 이는 정책을 수행하는 센터나 민간 협회에서 고립되어 있거나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지원 서비스와 연결해 주는 것이다. 지원서비스는 ‘두 번째 기

회의 학교(École de la Deuxième Chance)’와 ‘직업교육 학교’를 통해 제공된다.

‘청년참여계약’ 외에도 2020년에 마련된 고용과 사회진입을 위해 개별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해 주는 ‘1청년 1문제해결 플랜(Plan “1 jeune 1 solution”)’과 ‘16세~18세 특별 지원(Promo 16-18)’ 등이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고용유도 지원정책은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3개의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축은 ‘보다 나은 정보제공’으로 Inserjeunes와 Inser-sup 사이트를 통해 일반적인 기본정보와 청소년 활동결과 정보를 제공한다. 더불어 고용시장의 고용정보, 민간 공립기관의 구직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두 번째 축은 ‘청소년 사회진입 유도’로 중학교부터 기업과 연계한 직업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공동 직업작업을 실시하고, 직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의 개별 면접도 진행한다. 사회진입 유도에는 기업이 주된 역할자로 정부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한다.

세 번째 축은 ‘직업교육 제공’으로 정부는 향후 2년간 약 5만 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 직업교육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을 유도하기 위한 심화 과정도 강화하였다.

직업교육의 프로그램은 다양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교육으로 개별적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고용과 자립을 위한 동반지원계약’, 빠른 사회진입을 위한 ‘단기 직업교육’, 학교로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과 직업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맞춤형 초기 교육과정(Parcours Aménagé de Formation Initiale: PAFI)’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프랑스 고용센터(france travail)’는 26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6개월간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프랑스 정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핵심은 청소년들의 학교 교육 실패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지 않고 이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진입하여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는 다른 방식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직업 준비와 직업 활동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https://www.service-public.gouv.fr/particuliers/vosdroits/F229#:~:text=Parcours%20am%C3%A9nag%C3%A9%20de%20formation%20initiale%20\(PAFI\),%C3%A4tre%20volontaire%20pour%20en%20b%C3%A9n%C3%A9ficier](https://www.service-public.gouv.fr/particuliers/vosdroits/F229#:~:text=Parcours%20am%C3%A9nag%C3%A9%20de%20formation%20initiale%20(PAFI),%C3%A4tre%20volontaire%20pour%20en%20b%C3%A9n%C3%A9ficier)

<https://www.via-competences.fr/actualites/10-mesures-cles-pour-favoriser-lemploi-des-jeunes>

<https://www.sciencespo.fr/liepp/fr/actualites/bernard-gazier-les-ni-en-emplois-ni-en-etudes-ni-en-formation-neets-en-france-un-defi-qui-re/>

<https://www.lesrencontreseconomiques.fr/2025/debats-idees/neets-la-difficile-integration/>

<https://www.leparisien.fr/economie/sur-une-generation-on-considere-que-70-des-jeunes-le-seront-a-un-moment-cest-quoi-le-phenomene-neet-08-01-2026-Z7YLPPKBGFDMRF3YSCRHWTR3TQ.php>

## 해외동향 독일

## 독일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권민정(보쿰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독일에서는 매년 약 5만 명 이상, 전체 청소년의 약 6%가 졸업장 없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연방제 특성상 교육 및 청소년 지원이 주별로 다르게 운영되기에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도 각 주별로 다르게 운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에서 양육상담소(Erziehungsberatungsstellen)와 학교사회복지(Schulsozialarbeit)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핵심 사회서비스로, 결석·중퇴 예방과 대처를 담당한다. 양육상담소에서는 6-21세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학교 결석, 가족 갈등, 행동 문제를 상담하며 학교 복귀 계획과 부모 교육을 제공하고, 학교 재학생(결석 위험군 포함)을 위해 학교 내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조기 개입, 가족 방문, 취업 상담을 진행한다.

이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청소년 직업훈련소(Jugendwerkstätten)가 있다. 이는 지역별 실무 작업장과 사회교육을 결합한 복합 시설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형태는 아니지만 여러 주에서 널리 운영되고 있다. 운영 주체는 카리타스(Caritas)나 디아코니(Diakonie) 같은 비영리단체 또는 지역 청소년청(Jugendamt)이며, 지역 직업센터(Jobcenter)와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를 중퇴하거나 직업 훈련 과정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제2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격을 띤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의 청소년 직업훈련소는 해당 주 교육부의 슬로건 ‘진로 계획 없이 졸업하지 않기(Kein Abschluss ohne Anschluss)<sup>1)</sup>’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각 지역에 지역 조정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가 없거나 직업 훈련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기술 중심의 직업교육을 제공한다. 이 주에서는 ‘시작(Start)’이라는 프로젝트도 진행중이다. 오버베르기셔 지역

① 학교 졸업 후 누구도 진로 계획 없이 방치되지 않는다는 교육정책 목표로 직업교육이나 대학 진학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청소년을 지원한다.

(Oberbergischen Kreis)의 '시작 프로젝트'에서는 졸업장 없이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로 고용센터를 통해 연결된 청소년들을 교육 전문가와 직업 전문가가 돌본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공동 활동들을 통해 고정된 시간표나 절차 없이 자연스러운 활동을 하며 일상생활에 다시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다. 한편 뢰케스바겐(Hückeswagen) 시에서는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을 준비하도록 도와준다. 졸업증서 취득률은 약 87%이다.

라인란트 팔츠(Rheinland-Pfalz) 주에서는 '졸업장 없이는 누구도(Keiner ohne Abschluss)'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주로 실업학교(Realschule)에서 운영되며 졸업장 없이 학교를 떠날 위험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한다. 개별 맞춤형 교육 과정, 개인적인 돌봄,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졸업장을 취득하고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규모 학습 그룹을 만들고 지속적인 멘토링을 통해 주 5일 중 2일은 시험 준비를 하고 나머지 3일은 인턴십을 하는 방식이다. 졸업장 없이 학교를 떠난 학생들을 위해서 졸업장 취득 준비반을 운영하기도 한다. 본 프로그램은 주 전역에서 20개 학교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라인란트 팔츠 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학생들의 85%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장을 취득했으며, 90%가 취업 또는 직업 훈련을 시작했다고 한다.

카린 프리엔(Karin Prien) 연방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한 미디어그룹과의 인터뷰에서 2035년까지 학교 중퇴율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연방 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의 안드레아 날레스(Andrea Nahles) 청장 역시 학교 중퇴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추가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는 이들의 실업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높기 때문이다.

양육상당소, 직업훈련소를 비롯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독일 각 주의 프로그램들이 제 효과를 발휘하여 독일 아동 복지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https://www.zdfheute.de/politik/deutschland/schule-abschluss-jugendliche-schulabbrecher-100.html> (검색: 2026. 1. 18)

<https://www.zeit.de/gesellschaft/schule/2025-10/schulabschluss-abbrecherquote-statistisches-bundesamt> (검색: 2026. 1. 18)

<https://jugendhilfeportal.de/magazine/youth-wiki/allgemeine-und-berufliche-bildung/schulabbruch-verhindern> (검색: 2026. 1. 18)

<https://www.mkjfgfi.nrw/tags/jugendwerkstaetten> (검색: 2026. 1. 18)

## 철학 없는 디지털 복지?

#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던지는 질문

박홍재(웨스턴시드니대학교 교수)

호주는 학대나 방임 등 위험으로부터의 아동 보호는 물론, 그들의 신체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체계가 OECD 국가 가운데 비교적 촘촘하게 갖추어진 나라다. 코로나 직후에 수립된 '2021 국가 아동 정신건강 전략(National Children's Mental Health and Wellbeing Strategy 2021)'은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정신건강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선도적 사례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16세 미만 SNS 금지'라는 강한 규제 카드가 등장했다는 점은, 기존의 지원 중심 접근만으로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워졌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는 아동기(childhood)가 시장이 소비해도 되는 자원인가, 아니면 사회가 보호해야 할 공공재(public good)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25년 12월부터 시행한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mendment (Social Media Minimum Age) Act 2024)은 온라인 교류나 상호작용(online social interaction)이 주된 목적인 플랫폼이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 개설 및 유지를 기술적으로 차단해야 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5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제한다. 이 법의 대상이 개별 아동이나 부모가 아닌 빅테크 (Meta, X, TikTok 등 10개 플랫폼)에 있다는 점은, 디지털 위험을 가정 내 사적 책임에서 기업과 국가가 분담하는 사회적 인프라의 문제로 재배치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호주 내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모든 아동이 SNS에 접속하지 못하니 어떤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보편적 보호 논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또한, 이 디지털 금지 조치를 차량 안전벨트 의무화나 미성년자에 대한 술·담배 판매 금지 등과 같은 '최소한의 공적 규제 장치'라는 맥락에서 바라보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제도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일단 이 법이 시작된 지 첫 한 달 만에 약 470만 개의 미성년 계정이 비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은 이 조치가 표면적으로는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기적인 결과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위협에 대한 노출로부터 일정 부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동시에, 일방적인 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증거도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청소년은 시행 이후 또래 관계에서 단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안면 인식 기술을 통과하거나 부모의 신분증을 빌려 인증을 우회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또한 Reddit(소셜뉴스 플랫폼)과 Digital Freedom Project(시민단체)는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위와 같은 16세 미만 SNS 금지 제도의 기술적, 법률적 난관은 역설적으로 또 하나의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과연 이 디지털 규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디지털 복지인가, 아니면 불확실성을 이유로 권리를 먼저 거둬들이는 디지털 통제의 한 형태인가? 우선 이 제도의 본질은 단순한 기술적 차단이 아니라, 디지털 위협을 개별 가정이 홀로 감당해야 할 사적 문제가 아닌 사회 공동의 공적 위협이라고 재정의하는 데 있다. 아동의 디지털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의 책임을 개인과 가정의 절제력이 아닌, 기업과 국가의 구조적 의무로 전환한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접속을 차단 또는 금지하는 것만으로 아동이 보호된다거나 그들의 복지가 개선되는 것은 아닐 듯하다. 과연 SNS를 닫으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사회 복지 영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디지털은 이미 일상의 도구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SNS는 단순한 놀이 공간을 넘어 소통과 정체성 형성의 주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호주가 실험하고 있는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SNS 차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고립’에 대한 대책과 같은 대응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중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원주민 청소년, 비도시·원격지 거주 청소년 등 기존에 SNS를 통해 또래 관계와 지원 서비스에 접근하던 사회·지리적 취약 집단의 고립 심화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디지털 복지가 ‘접속 차단’에 머물지 않으려면, 복지, 보건의료, 교육 및 문화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오프라인 안전망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

다. 디지털 규제는 디지털 복지의 출발점일 뿐, 그 자체가 도착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 참고자료

Online Safety Amendment (Social Media Minimum Age) Act 2024, <https://www.legislation.gov.au/C2024A00127/asmade/text>

## 해외동향 일본

# 아동복지와 모자보건 기능의 통합지원을 위한 아동가정지원센터의 ‘서포트 플랜’

최은희(마쓰야마시노노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부 준교수)

2024년 4월부터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본의 각 기초지자체는 ‘아동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다. 센터는 임신부부터 모든 양육 가정과 아동을 대상으로 모자보건과 아동복지 기능을 통합해 상담 및 지원을 수행하는 핵심 공적 기관이다. 특히, 이 두 기능을 실무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새롭게 법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이 바로 ‘서포트 플랜’이다.<sup>1</sup> 서포트 플랜이란 아동가정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임신부와 아동 및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포괄적이고 동태적인 지원 계획을 말한다.

## 1. ‘서포트 플랜’의 도입 배경

먼저, 가족 구조의 변화와 양육 리스크의 개별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 지역사회 유대 약화는 양육의 고립화, 이른바 ‘고독한 육아’ 문제를 초래했다. 과거의 전통적인 상호부조 네트워크가 약해지면서 양육의 부담이 개별 가족의 영역으로 사사화(私事化)되었다. 따라서 단절된 유대를 제도적으로 복원하고 공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의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서포트 플랜이 요청되었다.

다음으로, 칸막이 행정과 관료주의 탈피를 들 수 있다. 기존에는 모자보건법의 ‘자녀양육세대 포괄지원센터’와 아동복지법의 ‘아동가정 종합지원거점’이 각각 운영되었다.<sup>1</sup> 그러다 보니 이원화된 구조 속에서 아동의 발달 단계나 리스크의 심각도에 따른 ‘끊김 없는 지원’을 저해했다. 실제로 보건 영역에서 발견된 고위험 가정의 신호가 복지 서비스로 이어지지 못해 중대 아동학대로 번지는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두 기능을 통합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방적 개입의 효율성 제고도 중요한 도입 배경이라 하겠다. 출산전후 및 영유아기의 예방적 개입은 아동양육시설 조치 등 사후적 개입에 비해 사회적 효율성이

① こども家庭 (2024a), 『こども家庭センターガイドライン』.

높다. 학대가 심각해진 뒤의 사후 보호와 의료 케어에는 막대한 사회적·재정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2. 아동가정지원센터가 실시하는 ‘서포트 플랜’의 특징

무엇보다 서포트 플랜은 아동기본법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참여를 중시한다. 2023년 시행된 ‘아동기본법’에 따라 계획 수립 시 ‘아동의 의견 표명권 보장’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 확보’가 엄격히 요구된다. 이에 따라 ‘센터 가이드라인’에서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나 보호자, 임산부와 직접 면담하여 의견을 정중히 듣도록 명시하고 있다.<sup>2</sup> 이는 시혜적인 온정주의 개입에서 벗어나, 적정 절차에 근거한 ‘협동적 지원 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대상의 포괄성과 계획 구성 요소의 구체성이 특징이다. 특정 위기 가정(임산부, 요지원 아동, 요보호 아동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국한되지 않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녀 양육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플랜에는 구체적인 지원 ‘목표’,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 및 사회자원(산후 케어 사업, 일시 돌봄, 자녀양육세대 방문지원사업 등)’, ‘관계 기관의 역할 분담’, 그리고 ‘진행 관리(모니터링 및 평가) 시기’를 상세하게 기록한다.

더불어, 센터는 다기관 협동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모자보건 기능과 아동복지 기능 쌍방이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의 교육기관, 의료기관, 민간 NPO 등과의 다기관 협동을 추진한다.

결과적으로 서포트 플랜은 서로 다른 전문 직역이나 조직을 연결하고, 공통의 목표를 향해 지원을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높인다.

## 3. 서포트 플랜 도입의 성과 및 과제

가장 큰 의의는 계획 수립 프로세스 자체가 지닌 복지적 가치를 들 수 있다. 서포트 플랜 수립 자체가 아동과 가정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검토한다는 의의가 있다.<sup>2</sup> 지원자와 당사자가 대등하게 과제를 사정하고 목표를 공동 설정하는 과정은 당사자의 자

② こども家庭庁(2024b),『こども家庭センターガイドラインのポイント』.

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 실천이다.

이와 함께 다기관 연계의 가시화를 통해 중층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것 또한 큰 성과이다. 경제적 빈곤, 보호자의 정신질환, 가정폭력 등 복합적인 문제는 단일 기관의 대응 한계를 넘어섰다. 서포트 플랜은 ‘누가, 언제,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를 구조화함으로써 전문가들의 경험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가시화하고, 지원의 중복이나 누락이 없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한다.

실제로 제도 도입 초기 조사 결과, 약 90%가 정보 연계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다고 응답했다.<sup>3</sup> 하지만 서포트 플랜 수립이 아직 ‘노력 의무’에 머물러 있어, 약 46%의 지자체는 지원 계획을 전혀 작성하지 않는 등<sup>4</sup> 지역 간 격차 해소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

③ KPMGコンサルティング株式会社 (2024), 『令和5年度 こども・子育て支援等推進調査研究事業 最終報告書』

④ 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 (2025), 『令和6年度子ども・子育て支援等推進調査研究事業 こども家庭センター設置に伴う要保護児童策地域協議の活用 況の態把握と果的な運用について 報告書』

# WELFAIRE

# ISSUE

[www.welfare.seoul.kr](http://www.welfare.seoul.kr)

# TODAY



**SWF**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시복지재단 (우 04147) Tel. 02-1670-5755